

다가온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친기업적 대처

왜

부자들을 위해

노동자 서민이

희생해야 하는가



미국 제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 주거, 저축, 연금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 혼란은 예고된 것이었다. 출발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 빈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고이자의 대부를 해 주는 것 — 위기였다.

많은 이들이 대출금 상환을 제때 못 할 것이 뻔했다. 그러나 대부자들은 다른 은행과 금융 기관에 부채를 팔아 돈을 벌 생각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위기가 닥쳐왔다.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어떤 기업이 파산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장은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경제의 기본은 튼튼”하기 때문에 위기가 심각하지 않고 곧 사라질 거라고 말한다.

저들이 거짓말을 하는 동안 전 세계 노동계급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맞서 싸우는 것이다.

» 3면으로 이어짐



미국발 은행 파산과
경제 위기

맑스주의 경제학자
정성진 교수에게 듣는다
8~9면

알렉스 캘리니코프 논평
— 체제의 위기와 저항의 건설
4면

경제 위기 시대
우리의 과제
3면

곳곳에서 패배하고 있는
대테러전쟁

4면



볼리비아 우익의 폭력적 도발
5면

교원평가제를
지지해야 하는가

6면

김정일 와병설과
북한 급변사태 논란

7면



여성 칼럼
— 성형 권하는 사회

11면

“인용해도 될까요?”

“조금 있으면 북한 잠수함·무장간첩도 등장하나요?”

“새우깡에 머리를 놓고 오셨다던데 사실 입니까?”

— KBS 〈대통령과의 대화〉 시청자 질문 게시판에서

“언제든 다시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는 ‘집재적 촛불시위자’들이 우리 사회의 저층에 계속 쌓여 가고 있다.”

—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대우 윤영신의 걱정

“전쟁을 각오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북한동포 2천2백만 명을 해방시키고 일류국가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열정과 용기가 있는가?”

— 김정일 외병실에 흥분한 조갑제

“우리나라는 시위 진압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자제하고 있다. … 레이저로 시위 진압하는 선진국도 있다. 오죽하면 경찰 버스로 시위대를 막았겠나?”

— 여청수

“더구나 머리를 민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여. 누구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고 정권 퇴진하라고 하고 웃기는 뽕뽕들이 있어, 진짜. … 불교 믿는 나라 …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네요.”

— 우익 목사 신일수

“한때 9개국 여성들과 교제했다 …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남성 위상을 세우기 위해”

—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정욱

“얼마 전 학교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취업박람회 열었다.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루 아침에 자르는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취업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냐”

— 한 성신여대 학생

“‘대화’가 아니라 ‘2MB 원맨쇼’였어요”



지난 9일 KBS 등에서 방영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은 ‘대화’는 커녕 조리 없는 자기변명으로만 일관해 빈축을 샀다. 국민 패널로 참가한 촛불 대학생 **성지현**(다함께 회원) 씨는 이 프로그램이 사전부터 철저히 검열·통제됐음을 다음 아고라에 폭로했다. 〈저항의 촛불〉 서범진 기자가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어떤 검열과 통제가 있었던 건가요?

패널로 섭외된 직후, 담당 기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프로그램 준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좀 적어서 주면 좋겠다, 검열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질문지를 보내니 처음에는 “분량이 너무 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에는 “백골단이나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아예 “지지울 얘기는 빼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도 아닌데 왜 빼야 하나”고 항의했죠. 그러자 다시 전화가 왔고 [작가들이 켜] 질문 대본을 아예 쪽 불러주면서 “[이대로 할지 말지] 예스나 노로만 대답하라”고 했어요. 거절하면 패널

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하면서요.

다른 패널 분도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분은 학자금 금지뿐 아니라 등록금 자체가 너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작가가 준 대본에는 그 얘기가 빠져 있었대요. 그건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다고 했대요.

이렇게까지 내용을 통제하려고 한 이유가 뭡까요?

처음 KBS 측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에게] 질문지를 절대 미리 보내거나 하지 않는다”고도 했었죠. 그러나 나중에 대기실에서 듣게 된 바로는 ‘대통령이 미리 준비해서 알찬 답변을 하는 게 좋으니 2줄 정도로 요약해 미리 질문지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청와대에서 압력이 존재했다고 봐요. 전에 장미란 선수와 촛불 진압 전경을 패널로 부르라던지, 그런 요구도 있었다



이명박은 촛불 시민과 ‘소통’한답시고 색소 물대포와 백골단을 투입해 왔다

고 보도됐죠. 처음부터 청와대는 대화할 생각이 없었고 이명박의 황당한 주장만 일방적으로 담으려 한 거죠.

이명박의 궤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황당했어요.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은 자신의 공약이 아니라고 아예 딱 잘라 거짓말을 했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비정규직은 예전보다 나아져 정규직 임금의 60퍼센트는 받더라는 등 ….

평화적 방법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도 얘기하던데, 인터넷 아고라에서 조종동 불매 운동하는 사람조차 잡아가고 국가보안법으로 사람들 잡아가면서, 정말 너무 억제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전과 경력자면서 법치 이런 얘기하는 것이 너무 웃겼어요. [촛불시위]주동자냐고 제게 물었는데, 저는 정말 ‘맞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같이 국민 삶 망치는

‘전문 사기꾼’에 맞서 그에 반대하는 ‘전문 시위꾼’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질문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죠.

아고라에 이런 진실을 밝히는 글을 올리자 많은 호응이 있던데요.

일단 그런 반응이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이명박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방송에서 싸운 것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탄압이 너무 심해서 눈에 보이는 촛불 크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명박에 대한 분노는 정말 저변에서 계속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석 때 가족과 친척이 모였을 때도 다들 경제 대통령이라면서 사람들 삶을 더 어렵게 하는 이명박을 성토했어요. 어떤 계기만 있으면 다시 촛불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계속 싸워 나갑시다.

인터뷰 · 정리 서범진

‘좌편향 교과서’ 시비 — 우편향적 역사 왜곡을 위한 공격

박대훈

인천의 현직 역사 교사

한국 정치사에서 우파(보수 내지는 수구 세력)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친일파, 왜곡된 반공세력 등으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정치·경제적 기득권을 확장해왔다. 이들은 우파 이데올로기 전파를 위해 언론과 교육의 통제·획일화를 요구하고 관철해 왔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진보세력은 언론과 교육 현장에서 한국사회에 더 이상 우파 이데올로기가 파급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일정 부분 성과를 획득해 갔다.

위기를 느낀 한국의 수구적 우파들은 1987년부터 다양한 세력으로 개편됐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는 ‘청산돼야 할 친일파’, ‘수구꼴통’, ‘통일 반대 세력’으로 이해돼 왔다. 결국 ‘자유주의 연대’, ‘기독교 사회책임’, ‘뉴라이트’ 등의 여러 단체가 우파 내 개혁을 주장하면서 등장했으며 최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교과서포럼’도 그 중 하나다.

이들은 ‘친일과 독재’라는 자신들의 원죄를 세탁하는 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이용하려 한다. 이들이 ‘민중주의에 의한 좌편향적 시각’으로 서술했다고 지목한 금성출판사

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지난해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전국 학생들 중 54.4퍼센트가 공부한 교재다. 서울대 교수 박효종·이영훈 등 ‘교과서포럼’의 핵심 학자들은 단순히 ‘교과서 수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발간하고 2010년으로 예정된 교과서 개정에서 자신들의 교과서가 채택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후소사 교과서의 한국 확장판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는 역사전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기본도 갖추지 못한 우편향적 시각의 교

과서에 불과하다. 양심과 의식이 있는 학자나 교사라면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가 편파적(제너럴 셔먼호 사건, 김구, 김대중, 이승만·박정희 [등의 사례])이고 식민사관적 서술(방곡령, 러일전쟁, 일제강점기 사회간접자본 확충, 친일문제 [등의 사례]), 사실관계 잘못(김옥균, 개화파, 서재필, 이승만 [등의 사례])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교과서포럼’이 주장하는 것처럼 ‘좌편향적’이지 않다. 이미 수많은 역사학자에 의해서 검증된 교과서이다. 만약 검증이 더 필요하다면 자신들부터

신앙처럼 믿고 있는 ‘식민사관’, ‘독재와 냉전 사관’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교과서포럼’이 객관적 사료라고 제시한 것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작성된 자료들이다. 결국 일본의 수구적 우파가 펴낸 ‘후소사 교과서의 한국 확장판’에 불과할 따름이다.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자기 민족의 동력을 부정하고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옹호하는 이런 교과서를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역사 교과서에서 침략과 식민에 대한 반성이 사라지고 성공한 쿠데타를 찬양하거나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 모호해지는 순간, 한국 사회의 위기는 시작되는 것이다.

기업주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자

» 1면에서 이어짐

우리는 단결할 수 있는 공통의 요구를 가지고 있다.(13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참고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고유가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회사들의 이윤에 특별세를 매겨야 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묶어두려는 것에도 맞서야 한다. 생활수준이 하락할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에 호응할 것이다.

또,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서 불안정을 더 키울 것이기 때문에 점령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즉각 철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사회의 지도자들은 이윤, 경쟁, 전쟁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다가올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많은 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기업주들의 위기에 그들 자신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왜 경제 위기가 발생했는가?

최근 세계 시장을 강타한 경제 위기 앞에서는 저들은 참으로 황당한 말을 하고 있다.

미국 지도자들은 미국 경제의 전반적 상황이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제프 랜달은 미국 제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몰락은 ‘자본주의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위기는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니다. 또, 단순히 규제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현재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다.

비록 일부 기업들이 폐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체제 전체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이윤율을 회복하지 못했다.

최근의 투기붐은 이런 사실을 감춰 왔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명백해지자 심리적 공황 상태가 찾아왔고 투자자들은 한때 건전해 보였던 투자를 회수하기 시작했다.

결으로 무슨 말을 하든, 미국 지배자들은 지금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조지 부시 정부는 엄청난 돈을 들여 베어스틴스 같은 금융 기관을 구제하고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를 국유화했다. 그들은 리먼브러더스도 살릴 수는 없었다. 구제 금융을 계속 남발했다간 미국 중앙은행이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다음에는 어떤 대형 금융 기관이 붕

괴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체제를 운영하는 자들이 기업의 CEO나 은행가, 정부 장관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바로 이들이 현재의 ‘카지노 경제’에서 이득을 챙긴 자들이다. 비록 그중 일부는 도산했지만 말이다.

‘월급 고개’

최근 이명박 정부는 ‘9월 위기’는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실패하는 등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달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품과 이에 연계된 금융권의 부실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 지배자들은 두려

워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분기에만 개인 부채가 23조 1천억 원 늘어나 7백 80조 7천억 원에 이르렀고, 한 웹사이트 조사에서는 물가 폭등과 적은 월급 때문에 60퍼센트가 넘는 직장인이 월급이 나온 지 보름 만에 월급을 다 써버리는 ‘월급고개’로 고통 받는다고 대답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소득 기준 하위 20퍼센트는 매달 44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중소기업 줄도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고용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물가가 폭등했지만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경제 혼란이 정치 위기를 가져오고 최근의 그루지야 전쟁 같은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언론의 논평가 들은 자유시장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

우리는 대안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재벌과 투기꾼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생산과 투자를 결정하는 계획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사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투쟁들을 고무해야 한다. 저들은 우리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군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싸워야 한다.

이것은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첫 걸음 이 될 것이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엉터리들

강동훈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한국의 금융 시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다.

9월 16일 하루에만 주가가 6퍼센트 이상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51조 원 넘게 사라졌다. 원/달러 환율은 50.9원이나 폭등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50원이 넘게 올랐다.

그러나 한국의 주류 언론과 경제연구소 들은 바로 올해 초만 해도 ‘미국 경제와 탈동조화’를 주장한 바 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중국·인도 등

의 호조 덕에 한국이 큰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 말에 내놓은 <2008년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나 <SERI 전망 2008> 같은 책에서는 “대외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미국 경기와의 탈동조화는 지속”, “미국 경제와 신흥국가들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수출 모멘텀은 유지” 등을 주장하며 한국 경제를 낙관했었다.

그러나 금융 위기의 여파로 8개월 반 만에 중국 증시 시가총액에서 19조 위안(약 2천8백50조 원)이 사라지는

등 이른바 중국·인도 등의 ‘신흥시장’이 미국과 함께 몰락하면서 한국도 위기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엉터리 예측은 지배자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으며 그들의 경제 분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 준다. 사실 미국에서도 금융 위기가 조금 진정될 때마다 위기가 이제 끝나 간다는 근거 없는 예측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바로 얼마 전까지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장님에게 길을 인도하라고 맡기는 셈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체제의 위기에 맞서서 저항을 건설하자

국제적으로 저명한 맑스주의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적 차원의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며 영국에서 사회주의자의 과제를 제시한다. 물론 한국은 영국과 달리 아직 심각한 패배를 겪지 않은 여전히 강력한 노조운동이 존재하며 우파 정부에 맞선 대안과 투쟁을 건설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이 글은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다.

“앞으로 한동안은 자유시장 원칙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것은 1970~80년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설계한 자 중 하나인 사무엘 브리튼이 지난주 한 말이다.

브리튼은 미국 경제의 5분의 2에 이르는 부채를 진 대형 모기지 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한 미국 국가의 과감한 조처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

이렇듯 공화당 우파조차 세계 금융 시장의 붕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넷째로 큰 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이런 두려움을 더 강화했을 뿐이다.

전 세계는 금융 시장을 마비시킨 신용 경색과 물가 상승이 결합돼 발생한 경기 후퇴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또, 이런 경제 불황은 심화하는 지정학적 불안정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대통령 디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올 8월 8일 발생한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 전쟁을 뉴욕과 러시아에 대한 9·11 공격에 비유했다.

그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란 점에서 그의 말은 옳다. 그루지야 전쟁은 양대 핵 무기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을 눈에 띄게 고조시켰다.

이에 부시 정부는 긴장을 더 심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미군은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은신처’를 공격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좌파 정부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우익 쿠데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미국 대사를 추방했다.

한편, 경제·지정학적 불안정이 증가하는 와중에 고든 브라운 정부는 계속 자충수를 두고 있다.

브라운은 가장 연료비를 보조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들에 특별세를 매기는 데 실패했다. 그는 신노동당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노동당 정부의 무능력과 다음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루지야 전쟁 - 자본주의 위기의 시기에 제국주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보면서 영국 노동운동은 당혹감에 빠져 있다.

최근 노동조합총연맹(TUC) 회의에서는 주류 노조 관료들조차 브라운을 공격했다.

신노동당의 심각한 위기는 최근 리스펙트의 재앙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노동당의 왼쪽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가능함을 보여 줬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장 영국 좌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을 둘러싼 노동자 전투성의 부활이다.

1984~85년 광부노동자 대파업의 패배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은 약하고 산발적이었다. 노조 내 세력균형도 상근 관료들에게 유리했고 그들 중 대다수는 노동

당 정부에 매달렸다.

지금 이 상황이 변하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는 시점에서 공공부문 임금을 2퍼센트 수준에서 동결하려는 노동당 정부의 시도 덕분에 파업 활동이 눈에 띄게 되살아나고 있다.

이것은 파업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동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보여 주는 투지다.

노조 운동이 부활하면서 공통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공공부문 노조들의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패배의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심화하는 불황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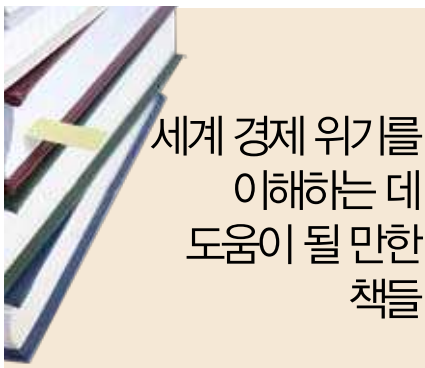
예컨대 우리는 반전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 그루지야와 파키스탄의 상황은 9·11 이후 시작된 미국 제국주의의 공세가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 중 누가 당선하든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고든 브라운의 임금 동결 시도에 맞선 저항 운동을 건설하는 데도 뛰어들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특정한 정치 경향에 속한 활동가와 아무 데도 속하지 않은 활동가들이 투쟁을 통해 단결할 수 있도록 온갖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 시도 속에서 신노동당의 진정한 대안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세계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책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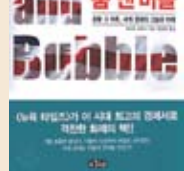


크리스 하먼 지음
책갈피

지금의 경제 위기를 왜 주류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지, 또 맑스주의 경제학은 어떻게 위기를 분석하는지를 쉽고 명쾌하게 보여 주고 있다.

《붐 앤 버블》

붐 앤 버블
책갈피



로버트 브레너 지음
이침이슬

오늘날의 경제 위기가 1970년대에 나타난 이윤율 저하의 산물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와 분석으로 입증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읽어 봐야 할 책이다.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마르크스 한국 경제
책갈피



정성진 지음
책갈피

맑스주의 경제학에 기초해 한국 경제 상황을 분석한 책. 1997년 외환위기의 근본에 이윤율 저하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

전쟁광들은 모든 곳에서 실패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의 이름 아래 온갖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은 모든 곳에서 실패하고 있고 전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외국 점령군을 매우 미워한다. 이란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미국이 부추긴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침략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난민 위기를 발생시켰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은 제국주의 경쟁을 심화시켰고 열강 간 전쟁

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어떤 유럽 외교관은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나쁘다고 말했다. 다수의 평범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엄청난 난민 위기, 기아, 부의 양극화에 고통받고 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부활했고, 나토 연합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날수록 탈레반에 대한 지지도 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하면서 카프카스뿐 아니라 심지어 미국이 자신의 뒷마당으로 여기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소말리아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부시 정부는 소말리아에서 이슬람법정연맹이 영향력을 획득하자 소말리아를 침략하도록 동맹인 에티오피아를 부추겼다. 그러나 미군이 중동에 발목이 묶인 상황에서 에티오피아가 독자적으로 점령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다. 최근에는 소말리아의 저항세력들이 남부의 중요한 항구에서 에티오피아군을 몰아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다른 전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이 탈레반의 ‘은신처’를 찾아 이웃한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감행하면서 불안정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서 ‘테러와의 전쟁’의 동맹인 파키스탄군과 미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점령자들은 점점 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라크 내부의 갈등도 계속되면서 한때 ‘평화롭던’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지역에서 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카프카스의 갈등은 여전히 뜨겁다. 나토는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폴란드는 미국 정부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참가했다.

만약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제국주의 군사력의 지나친 확장과 불황의 심화 앞에서 미국 정부는 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험을 벌일 것이다.

볼리비아의 유혈사태, 판돈이 커지고 있다

마이크 곤살레스

볼리비아에서 두건을 쓴 청년들이 정부 건물을 습격해 문서를 불태우고 닥치는 대로 파괴했다. 산타크루스에서 자칭 '시민 저항 운동' 조직인 아멜리아 디미트리외의 지도자는 카메라 촬영 중에도 비무장 원주민 여성을 폭행했다.

판도 주(州) 엘포르베니르의 농민들은 고속도로에서 지방 경찰과 민병대의 습격을 받았다. 농민 10명이 죽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원주민 지역사회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이런 폭력을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원주민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을 지원하는 자들 — '반(半)달'(메디아 루나)이라 불리는 볼리비아의 부유한 5개 동부 주들의 지배자들 — 이 볼리비아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장악했으니 무리도 아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동부 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민간 쿠데타'로 규정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돼 온 이 폭력 행위는 잘 조직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년 전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의 가스 및 석유 자원 국유화, 고원 지대 가난한 원주민들을 위한 부의 재분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볼리비아의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들은 '반달' 주들에 집중돼 있다. 과거에 볼리비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생산한 것은 광산이었다. 처음에는 은 광산이, 나중에는 주석 광산이 중요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자원은 동부의 석유·천연가스와 콩이다. 볼리비아에서 지역 자치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 지주·은행가·산업 자본가들이 자치를 들고 나온 것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끊기 위한 핑계거리일 뿐이다.

[지난해 말] 모랄레스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대중 운동의 요구들에 기초해 새로운 민주적 헌법을 작성하자, 동부의 부유한 권력자들은 본격적으로 반지 걸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모든 입법 활동을 사사건건 방해했고, 나중에는 동부 5개 주에서 자치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끔찍하고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 선동, 무차별 폭력과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의 지원에 힘입어 지주와 그 일당들은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부 주들의 지도자들은 지역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석유·천연가스 판매세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를 거부했고 독자적 주 경찰력을 창설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그들의 의도는 충돌을 통해 중앙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들

은 모랄레스 정부를 원주민과 농민의 정부라고 비난해 왔다.

자제

8월 10일 에보 모랄레스는 신임 투표에서 승리를 거둔 후 12월 초 새로운 헌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폭력이 증가하고 신파시스트 조직인 산타크루스 청년연맹(UJC)이 설치되는데도 모랄레스 정부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 주민투표 실시 전부터 광부 노동자 조직, 농민 조직, 엘 알토의 강력한 주민위원회들은 동부 주들의 지배자에 맞선 저항을 주장하면서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모랄레스 정부는 자제를 요청했고 심지어 강제로 저항 행동을 가로막기도 했다.

또, 모랄레스 정부는 '반달' 주 지배자들이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데도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저항을 요구할 때마다 모랄레스 정부는 자제를 호소하며 정부가 나서 협상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반달' 주 지배자들은 모랄레스 정부의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고 폭력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이를 전[9월 14일], 모랄레스는 판도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인 필립 골드버그를 추방했다. 골드버그는 옛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에

개입한 경험이 있는 자로, 그동안 볼리비아의 자치 운동 조직을 도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진정한 원인은 간단하다. 예컨대, '반달' 주들 중 하나인 타히라에서 볼리비아 천연가스의 82퍼센트가 생산된다. '반달' 주 지배자들은 볼리비아의 석유·가스 자원을 장악해 볼리비아 인구의 다수인 빈곤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

최근 사건들은 판돈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대자본들이 핵심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보여 줬다. '반달' 주 지배자들은 에보 모랄레스가 우물쭈물할수록 더 대담해질 것이고 폭력 행위를 계

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평범한 볼리비아인들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건을 뒤집어 쓴 건달들은 모랄레스 정부의 이성적 호소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볼리비아의 대중운동은 억압적이고 반동적인 볼리비아 지배자들에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는 힘과 단호함을 보여 준 바 있다. 지금이 그 힘을 다시 사용할 때다.

마이크 곤살레스는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스페인어문학부 부교수이고, 스코틀랜드의 신생 사회주의 정당 '솔리데리티(Solidarity)'의 당원이다. 국내에 번역 출판된 책으로는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책갈피)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지지해선 안 된다

강동훈

“학부모 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현인철 대변인에 대해 전교조가 지난 9월 8일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자, 보수 언론들은 기회를 놓칠 새라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

보수 언론들이 ‘전교조가 참교육의 초심을 잃었다’며 고양이 쥐 생각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말 역겹다.

그런데 우려했게도 진보진영의 일부에서도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교원평가제 방안을 내놓고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평가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원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인사에 반영하면 교사들이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공교육의 경쟁력이 올라가 사교육과 조기 유학 등이 줄어들다는 것이다.

일제고사 시행, 고교선택제 도입 등 이명박의 다른 ‘미친 교육’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에서 경쟁을 강화하면 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의 연장이다.

‘미친 교육’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모범으로 생각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런 정책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쫓기고, 가난한 지역보다 부유한 지역의 학교에 더 많은 국가지원금이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었다.

학생들의 시험 성적에 따라 교사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더욱 치열한 점수 경쟁에 내몰 수밖에 없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압력을 받게 마련이다. 실제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치러진 일제고사와 그 성적 공개를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초등학생부터 입시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의 경쟁 강화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사들 사이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에도 분명히 반대해야 하며 교원평가제에 맞선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가 학생들에 의한 교사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많은 학생·진보적 학부

모 단체가 교사 평가를 요구하는 것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촛불 운동에서 드러났듯이 학생들은 입시 경쟁과 학교의 억압적 운영에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고 이를 바꾸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학교 운영이나 교육 전반의 의사 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학생은 교육과 평가의 대상일 뿐이고 학생들의 생각은 교사들이 알아서 반영해야 할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교사와 대등한 교육 주체로 대우 받는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려면 학생 개개인이 교사와 수업에 대

해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들, 뉴라이트 계열의 학부모 단체들은 이런 열망을 교원평가제로 교사들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구조조정에 이용하고 전교조를 공격하는 데 교묘하게 이용하려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사 개개인과 교육 내용을 평가하고 그 내용이 교육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 자체를 전교조가 반대한다면 이명박의 ‘미친 교육’에 맞서 싸우길 원하는 사람들이 선뜻 전교조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교조는 성과급이나 인사와 연계된 이명박의 교원평가제에 단호하게 반대하면서도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교사 평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는 이명박의 교원평가제에 단호히 반대하면서도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교사 평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을 ‘파시즘’으로 보는 것은 옳은가

장호중

이명박 정부가 두 달 넘게 촛불 운동 참가자들을 구속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폭압적 만행을 저지르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같은 운동 내 일부 인사들은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 권력”이라고 규정했다.(〈프레시안〉8월 18일치.)

확실히 이 오만하고 광포한 자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파시즘으로 여기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잘못된 분석 때문에 잘못된 전략전술로 나아갈 수 있다.

맑스주의자들은 파시즘이 의회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반동적 독재 체제를 수립하고, 노동계급 조직을 분쇄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해 왔다.

“트로츠키는 이런 일반적 분석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였다. 그는 파시즘이 단지 자본가 계급 전체 또는 심지어 일부 대기업들이 추진한 정책이나 정치 경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파시즘은 하층 중간계급, 즉 뽀띠부르주아지를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대중운동으로 시작됐다.”(존 몰리뉴,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주간(맛볼) 55호.)

1930년대 나치가 보통의 경찰 국가나 군대로는 이를 수 없는 철저한 사회 통제를 이루고 노동자 조직을 분쇄한 것은 파시즘이 대중 운동과 그 간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간계급은 위로는 은행과 거대 독점기업들에게 짓밟히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과 조직 노동계급의 압력에 시달린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활수준과 사회적 지위의 급격한 하락에 절망에 빠지고 양대 계급 사이에 끼여 괴롭다고 느낀 중간계급은 파시스트들의 선동을 흡수하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

강력한 국가 통제와 인종차별, 민족주의 등 파시즘의 현상적 특징들은 모두 이런 중간계급의 모순된 처지와 사상에서 비롯한 것이다.

파시스트들은 종종 반자본주의적 미사여구를 사용하지만(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모두 자신들의 당에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붙였다) 실제로는 자본주의 자체가 아니라 일부 자본가들(투기성 금융 자본 등)에게 비난을 퍼붓는 데 멈출 뿐이다.

대신 경제 위기로 망가진 삶에 대한 원망을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과 좌파에게 돌린다.

중간계급의 대중운동

따라서 이명박 정부를 파시스트 정부라 부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의 집권 세력에게는 열광적 대중운동의 지원도 없고 지도자의 카리스마도 없다. … 타락한 부르주아에 대한 원한 따위는 애초에 흔적도 없다.”(고명섭, 〈한겨레〉2008년 8월 26일치.) 이명박 정부가 의회 민주주의와 노동조합 자체를 제거하려는 것도 아니다.

사실 ‘민간 파시즘’의 공포를 부각하는 운동 안팎의 주장들은 파시즘에 맞선 진

보·개혁 연합론과 마주 닿아 있다. “진보 정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진보 개혁적 세력도 차이를 넘어서서 … 이기려면 ‘함께’ 가야 한다”(김민웅)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손을 잡고 이명박이 파괴하려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을 추진한 친시장·친제국주의 정당일 뿐 아니라 시장에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자들이기도 하다. 집권당이자 다수당이던 2005년에도 이 자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을 배신하고 국가보안법의 수명을 연장시켜줬다. 오죽하면 촛불항쟁으로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급락해도 민주당 지지율은 제자리를 맴돌겠는가.

민주당과의 연합을 위해 운동의 요구 수준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삶을 제물로 삼아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두 신자유주의 정당 모두에 독립적인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수호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민주당이 너나 할 것 없이 찬성하는 신자유주의와 전쟁에도 반대하는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정일 와병설 논란이 보여 준 것

김영익

지난 9월 9일 김정일이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하면서 그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우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중병과 관련한 보도는 대부분 아님 말고식 추측성 기사들이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병을 앓고 있는지,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은 현 시점에서 알 수 없다.

김정일의 와병설을 놓고, 당장 주변 열강들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이나 급격한 붕괴가 동북아의 세력 판도에 미칠 파장을 경계한다.

특히 미국은 여전히 중동에 집중해야 할 처지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지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뉴욕타임스>도 미국 정부가 김정일 정권을 독재라고 비난하지만 동시에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낳을 파장을 우려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때도 클린턴은 재빨리 애도를 표하며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이 불안정해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북한과 북한 핵 동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를 맺은 바 있다.

그럼에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는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작계 5029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제는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 하고 주장하고 나섰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한미연합군이 대량살상무기 확보를 명분으로 북한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이 대규모로 탈북하면 이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북한의 ‘치안’을 회복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이 평양으로 진군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런 호전적인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하려는 것은 북한의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적 개입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더욱더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익들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려면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제국주의적 군사 개입의 빌미로 삼아 왔을 뿐이다. 오히려 미국은 벵커버스터 등 실전에서 사용가능한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2001년 <핵 태세 보고서>에서 북한 등을 선제 핵 공격할 계획을 세우는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포를 확산시켜 왔다.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김정일이 사망해 북한 군부가 사태를 장악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다면 이에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에는 북한의 강경파와 군부가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

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우익들은 최근 북한의 핵불능화 조처 중단도 북한 군부의 입김이 강화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의 지배자들이야말로 한반도 위기의 주범들이다. 1994년 북한 핵개발을 둘러싼 전쟁위기나 1998년 금창리 지하 시설을 둘러싼 위기 모두 미국이 초래한 것이었다. 북한의 핵불능화 조처 중단도 미국이 핵불능화에 상응하는 테러지원금 해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고자 북한 위협설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군사적 위협은 북한을 더 강경한 자세로 내몰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하게끔 만들었듯이 말이다.

그리고 남한과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급변 사태’에는 민중 봉기 등 북한 민중의 저항으로 북한 체제 전반이 흔들리는 것도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군 -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대북 군사 개입 계획을 담은 작전계획 5029는 폐기돼야 한다

포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은 점령군으로서 북한 민중의 자주적 활동과 저항을 억누르는 구실을 할 것이다. 마치 1945년 해방 이후 조선 민중의 염원을 미군과 소련군이 짓밟았듯이 말이다.

제물

5029 계획과 같은 군사 개입이 현실화하면, 북한을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완충지대로 여겨 온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 동북아 전체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 5029가 실행에 옮겨지면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에 개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북·중 국경 경비를 경찰에서 정규군으로 바꾸고 배치 병력을 늘려 왔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직 김정일의 건강이 어떤지는 불확실하며, 현재 그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당장에 공세적인 군사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경쟁이 첨예해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등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인 동북아에서도 앞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북한 권력구조의 위기는 저들에게 동북아의 ‘균형’을 일거에 흔들 수 있는 사태이며, 군사적 개입을 해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처럼 최악의 경우 동북아 최빈국 북한은 제국주의 패권 경쟁의 제물이 될 수 있다. 한반도 민중의 안전과 생명은 이들에게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저항의 가능성은 없는가?

남한 우익들은 김정일 와병설이 나오자 대북 강경책을 잇달아 요구하고 나섰다. 여전히 ‘주석궁에 탕크 몰고 가자’고 타령하는 조갑제 같은 우익들에게 북한 민중 스스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관심 밖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김정일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역겹기 그지없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이 낳을 혼란을 우려한다. 박노자 씨도 “고통스럽겠지만 북한의 자체적인 ‘자기 개선’, 즉 기존의 통치 집단의 자기 변신 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희망적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도 존재한다. 권력의 불안정과 지배자들의 압투가 민중 저항의 계기가 된 사례

들이 역사에 많다. 남한에서는 1979년 10.26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자 이듬해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서울의 봄’이 펼쳐진 바 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펼치는 등 스탈린주의 체제가 일시적으로 약화하자, 1950년대 내내 동독·폴란드·헝가리 등 동유럽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이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북한 지배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북한 민중이 저항을 일으키는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과 남·북한 정부가 북한 민중의 저항을 가로막고 짓밟지 못하게 저지하며, 북한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

맑스주의 경제학자 정성진 교수에게 듣는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모델의 종말



지난주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국유화된 후 세계 주요 증시가 일시적으로 안정되면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위기가 바닥을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에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사상 최악의 금융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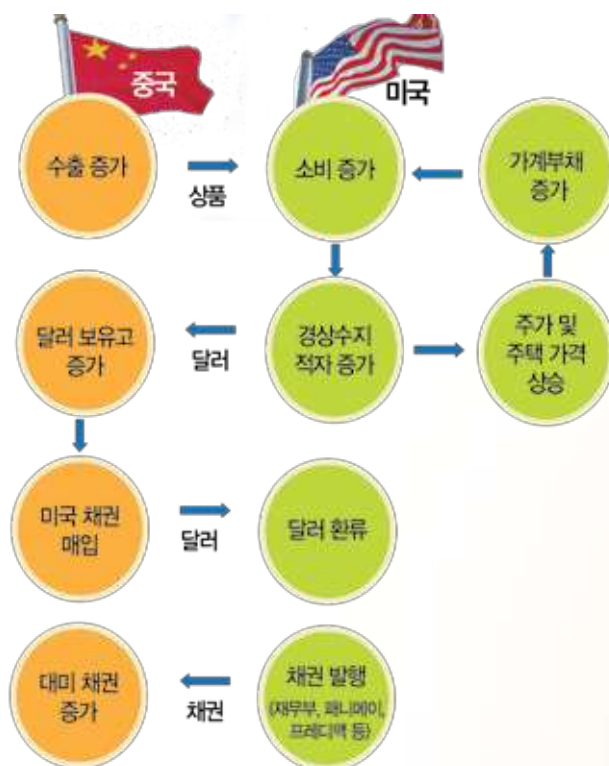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이고 1백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역시 5대 투자은행에 속하는 메릴린치가 뱅크로브아메리카에 전격 매각된 데 이어서, 부모 직전에 몰린 세계 최대 보험회사 AIG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한 사태가 그것이다.

미국 정부는 리먼브러더스의 경우 구제하지 않고 파산보호 신청을 하도록 내버려 둔 반면, AIG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8백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79.9퍼센트의 지분을 인수해 사실상 국유화했다. 미국 정부는 AIG의 경우, 리먼브러더스와 달리, 실물경제·소비자·연기금 등과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파산의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번 월가의 금융 쓰나미는 전 세계 증시 폭락세로 이어졌는데, 9월 15일 영국 증시가 3.92퍼센트, 16일 일본·중국 증시가 각각 4.95퍼센트, 4.47퍼센트 하락했으며, 우리 나라 증시는 무려 6.1퍼센트 폭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주가 폭락과 동시에 환율도 50.9원 폭등해서 “9월 위기설”의 위기 시나리오가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위기의 배경과 원인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는 단지 유통성의 위기가 아니라 연이은 투자은행의 부도 위기에서 보듯이, 지급불능의 위기가



〈그림1〉브레튼우즈 체제 27과 미국의 대외적 불균형의 심화

며, 또 단지 금융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 감소와 민간소비 감소에서 입증되듯이 실물경제의 불황으로 번지고 있고, 지난 2/4분기 EU·독일·프랑스와 일본이 전분기 대비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서 보듯이, 미국 경제 위기를 넘어 세계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한 직접적 원인은 2001년 미국의 추가제품 봉고에 따른 불황을 연준이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저금리 정책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주택 가격 거품의 팽창과 붕괴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반노동 공세에서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가치 이전과 양극화가 초래한 사상 유례없는 분배의 불평등, 즉 대내적 불균형의 심화와, 〈그림 1〉에서 보듯이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동아시아 수출국·산유국으로부터 달러 환유에 기반을 둔 이른바 “2기 브레튼우즈 체제”의 불안정성의 심화라는 글로벌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다.

더 근본적·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위기는 1970년대 이후 이윤율의 장기 저하에 따른 장기불황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번 위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위기의 불가촉성인데 이는 무엇보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부채의 증권화”와 파생금융상품의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의 증대에 기인한다.

이번에 AIG의 경우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이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같은 채권을 사들인 뒤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증권인 “신용디폴트스와프”(CDS)라는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DS는 현재 계약 액수가 약 62조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다가, 대부분 확인이나 해지가 어려운 당사자들 간의 계약 형태여서 향후 새로운 위기의 화약고로 간주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과 공통점·차이점

일부 경제사학과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루비니(N. Roubini)는 이번에 미국 경제의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 위기가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실물경제의 불황이 될 것이라 약 18개월 정도 지속되는 ‘U’자형 불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아리기(G. Arrighi)는 이번 위기의 과정에서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는 “최종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번 위기가 몇 가지 측면에서 1930년대 대공황과 닮은 점이 있다고 본다. 우선 이번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자기조절적 시장”,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과도한 맹신이 초래한 반동이라는 점에서, 1930년대 대공황 직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사상 유례없는 분배의 불평등과 그 결과로서 대중의 극심한 과소소비를 주요 요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시기처럼 세계적 헤게모니 국가가 부재하거나 결정적으로 약화된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미국 소득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이 소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50퍼센트에 달했는데 이는 불길하게도 1930년대 대공황 직전인 1928년과 같은 수준이다. 물론 오늘날은 미국 연준 등 각종 중앙은행의 기민한 대응 등이 1930년대와 달리 거시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나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1년 넘게 계속된 극도의 신용경색과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위기의 정도가 아직 이전의 주기적 불황 수준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번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 위기는 본질적으로 이윤율 저하의 위기라는 점에서 이윤율이 안정한 조건에서 발발했던 1930년대 대공황보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의 경우 케인스주의적 국가주의의 처방(비록 제한적이고 임시변통적인 처방이라 할지라도)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 위기는 그러한 케인스주의적 국가주의의 처방의 약효가 다 되면서 현재화된 1970년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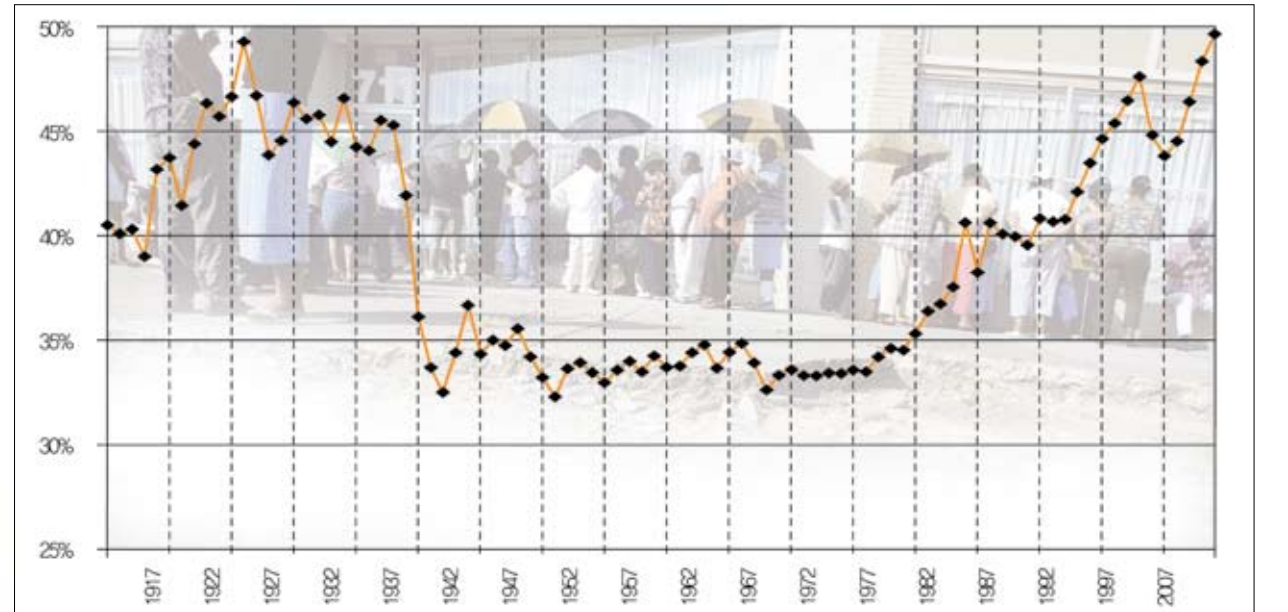
후 장기불황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이 최종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발발한 위기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위기에 대한 국가주의적 대응과 시장주의적 대응이 모두 실패한 조건에서 발발한 위기라는 점에서 더 심각할 수 있다.

나아가 1930년대 대공황의 경우 주로 자본 그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된 위기라면, 오늘의 위기는 자본 그 자체의 한계에 더하여 피크오일과 같은 자본 외부의 한계가 중첩돼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할 수 있다.

금융화가 위기의 원인인가?

이번 위기에서 “부채의 증권화”라든가 신용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이번 위기는 맑스주의 경제학보다는 민스키의 금융적 불안정성 명제와 같은 케인스주의



〈그림2〉미국에서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1917~2006

경제학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필자는 맑스의 이윤율의 저하 경향 명제, 가공자본 개념, 실물자본 축적과 화폐자본 축적의 모순에 관한 이론, 로자 룩셈부르크의 과소소비론과 토니 클리프의 영구군비경제론 등 맑스주의 경제학의 핵심 개념과 이론들은 이번 위기를 설명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데서 여전히 유효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번 위기가 무엇보다 1970년대 이후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 경향, 1980년대 이후 이윤율을 회복하려는 자본의 반노동 공세와 그에 따른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가치 이전의 결과로서 심화되는 과소소비 경향, 1990년대 이후 탈냉전기에 따른 영구군비경제 효과의 약화,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따른 “부채의 증권화”, 신용파생상품 등 가공자본의 팽창에 따른 금융적 불안정성의 증대와 거품의 팽창과 폭발이 중층결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민스키를 따르는 일부 케인스주의자들은 금융화에 따른 금융적 불안정성의 심화가 이번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본말전도이다. 금융화는 1970년대 이후 진행돼 온 이윤율 저하에 기인한 장기불황에 대한 자본의 대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화는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 속의 자본주의를 그럭저럭 지탱해 온 메커니즘이며,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는 금융화에 의존한 자본주의의 재생산 방식이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한계에 봉착했음을 입증한 것이다.

금융화에 의존한 자본주의의 재생산 방식, 혹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모델은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대두해 1990년대 이후 ‘글로벌スタンダード’로 행세해 왔지만,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 속에서 그 근본적 결함과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제 최종적 붕괴 국면으로 들어갔다.

시장근본주의, 자유시장 만능주의, 금융주도 축적체제의 수립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모델 혹은 워싱턴컨센서스는 세계 지배계급 내에서도 문제시되면서 21세기 들어 시장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 혹은 베이징컨센서스로 변형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의 몰락과 국유화, 금융 규제 강화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만약 일부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하듯이 신자유주의 금융화 모델이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축적체제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그 모델은 불과 20년도 지속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붕괴한 셈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에서 금융화가 아니라 도리어 “탈금융화”라고 할 만한 금융화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예컨대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2007년 10월 9일 19.1조 달러에서 2008년 9월 12일 15.1조 달러로 격감했고, 그 중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4퍼센트에서 16.9퍼센트로 감소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좌파의 과제

지난 1년 사이에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세 개가 사라지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만 남게 된 것(이들 역시 중장기적으로 독자적 생존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패니메이·프레디맥과 AIG 같은 미국 금융의 핵심부를 국유화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를 주도해 온 미국의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모델, 즉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국가주의로 결정적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매체인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조차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국가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국가주의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국유화 사례에서 보듯이, 이윤은 철저히 사적으로 독점하면서 손실이 나면 이를 구제금융이나 국유화 방식으로 국가에 떠넘기는,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케인스주의자들은 투자은행 규제, 신용파생상품 등 금융 규제를 이번 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으로 주장한다. 좌파는 금융 규제를 비롯한 케인스주의자들의 자본주의의 규제 요구에 대해서 그러한 요구가 비록 혁명적 반자본주의의 요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노동자 대중의 생활수준과 투쟁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면 지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위기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제거하지 않고 위기의 출구 구실을 해 온 금융만을 규제한다면, 케인스주의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자본주의에서 위기는 도리어 더 격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신용파생상품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종의 조절자 구실을 해 왔는데, 이를 제거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좌파는 금융 규제 요구를 반자본주의의 이행기강령의 문제의식에 기초해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금융 규제의 초점은 물론 금융의 반노동적 측면에 제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70년 전인 1938년 대공황의 막바지 국면에서 트로츠키가 제안한 〈이행기강령〉의 문제의식은 적절하게 보완될 경우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탈자본주의 전략의 구체화 작업에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트로츠키가 주장했던 “물가-임금 연동제”, “기업 비밀의 공개”, “은행 국유화와 신용제도의 국가 관리”, “노동자 통제” 등과 같은 요구들이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 국면에서 이행기강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성진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맑스주의 경제학자로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마르크스와 트로츠키》의 저자이고,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역자이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③

민주집중제는 반민주적인가?

[편집자] 이번 촛불항쟁에서 일부 사람들은 촛불항쟁의 자발성만을 예찬하며 조직이나 일관된 행동 지침은 필요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운동을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행동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자발성을 해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존 몰리뉴는 민주집중제적 사회변혁 조직은 자발성을 해치지 않고 운동의 전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적 중앙집중제(이하 민주집중제)는 민주적 논쟁에 따른 정책 결정을 모든 당원들의 행동 통일과 결합시키는 당 조직 원칙이다. 모든 당원들은 민주적 토론과 논쟁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실행할 때는 행동을 통일해야 한다.

레닌과 볼셰비키 시대 이래로 대다수 맑스주의 정당들은 민주집중제를 바탕으로 활동했다. 아니, 활동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주장했다”고 말한 이유는 이른바 맑스주의 정당들의 압도 다수가 사실은 옛 소련에 충성하는 스탈린주의 정당이었고, 그런 당에서는 중앙집중제가 압도적이어서 모든 당원이 모스크바에서 결정한 노선에 복종해야 한 반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경험으로 말미암아 민주집중제는 악명을 얻게 됐다.

그런데 스탈린주의가 맑스주의 개념이나 실천을 오용하고 왜곡해서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유로 우리가 맑스주의 개념이나 실천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맑스주의와 사회주의를 통째로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집중제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스탈린주의적 ‘민주집중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많은 좌파들 — 좌파 개혁주의자들,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율주의자들, 아나키스트들 등 — 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트로츠키주의 정당들을 비판하고 스탈린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다른 정당들도 싸잡아 비판한다.

예컨대, 영국에서 ‘리스펙트’ 국회의원인 조지 갤러웨이는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들이 ‘러시아 인형’[뚜껑을 열면 안에서 똑같은 인형이 계속 나오는 러시아의 전통 인형으로, SWP 당원들을 지도부의 꼭두각시라고 비꼬는 말이다] 같으며 SWP의 민주집중제를 비판했다. 그러나 갤러웨이를 제쳐 두더라도, 민주집중제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본래 반민주적인 조직 모델이라는 견해가 좌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나는 (1) 혁명적 노동자 정당이 투쟁 속에서 노동계급의 지도자 구실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민주집중제가 필수적이고 (2) 민주집중제가 반민주적이기는 커녕 사실은 가장 민주적인 당 조직 형태라고 주장하려 한다.

민주집중제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민주주의와 중앙집중제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레닌이나 다른 맑스주의자가 생각해 낸 모종의 자의적 조직 원칙이 아니라, 노동계급 투쟁의 본질 자체에 맹아적 형



운송 거부와 항만 봉쇄 투쟁으로 승리를 거둔 화물연대 노동자들
— 행동통일 없이 물류를 멈출 수 있었을까?

태로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노동계급 투쟁은 아래로부터의 투쟁, “압도 다수의 이익을 위한 압도 다수의 투쟁”이다. 노동계급 투쟁의 초기(예컨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부터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구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었다.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사회를 바꾸는 데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요구했다. 즉, 민주주의가 생산과 사회 전체로까지 확대된 사회민주주의를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각종 노동자 단체 · 노동조합 · 협회 · 정당, 기타 등등이 적어도 처음에는 민주적 규약과 절차를 채택한 것은 당연했고 필연적이었다.

민주주의

그러나 노동자 투쟁에는 중앙집중제의 요소도 내재해 있다. 자본의 권력은 본질적으로 매우 중앙집중적이다. 자본주의 기업에서 내려진 결정은 위에서 아래로, 기업 소유주나 이사회에서 말단 사원에 게로 전달되고 거의 군사적 규율에 따라 집행된다. 자본주의가 나이를 먹고 자본의 소유가 더 집중될수록 이 중앙집중화 경향도 점차 확대되고 강렬해진다. 삼성이나 포드나 엑슨이 가격, 공장 폐쇄, 노동쟁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전략적 결정을 내리면 그들은 전 세계 [지사]의 모든 관리자가 이 결정을 집행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런 [자본의] 권력에 맞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다.

계급투쟁의 가장 기본적 형태인 파업을 생각해 보라. 특정 작업장, 회사, 산업의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 인지를 민주적으로(이상적으로는 대중 집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노동자들이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만약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는데도 일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면 그들은 거의 틀림없이 해고당할 것이다. 그러나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이 났다면 모든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 동참하지 않는 노동자는 파업 파괴자, 배신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맹아적인 민주집중제다. 그리고 민주집중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지적해 줄 만한 사실이 하나 있다.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연대와 규율이 개인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항상 비난하지만 자본의 중앙집중적 권력이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혁명정당의 민주집중제는 파업의 민주집중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도 있다. 파업에서 민주집중제는 주로 경제적 투쟁에 적용되고 경제 투쟁으로 제한된다. 당에서 민주집중제는 정치적 수준에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데올로기 수준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혁명정당이 노동자 운동 전체 안에서 자발적인 소수의 조직이고, 혁명정당의 목표는 정치 권력, 즉 국가 권력을 장악하도록 노동계급을 지도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동계급 사이에서 독세하는 부르주아 사상에 맞서 그리고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고 노동자 투쟁을 부르주아지에게 팔아 넘긴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다른 정치 경향들(개혁주의 · 스탈린주의 등)에 맞서 다양한 측면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치적인 민주집중제의 필요성은 파

업의 사례를 혁명적 상황의 사례로 바뀌보면 알 수 있다. 즉, 대중이 행동에 나서고, 기존 국가 기구가 붕괴하고, 아마도 이중 권력의 요소들 — 노동자 평의회, 작업장 점거 물결 등 — 이 존재하고, 무장 봉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운명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말이다. 가장 격렬한 계급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국민 투표 따위는 불가능할 것이고, 의회 청문회 방식의 공개 논쟁을 벌일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계급의 적에게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고 반(反)혁명 탄압을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실, 노동계급의 모든 부문에 뿌리를 내리고 내부 민주적 논쟁이라는 강력한 전통을 가진 정당만이 대중의 분위기와 [무장 봉기의] 성공 가능성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은 분명히 (서울 · 광주 · 부산에서 또는 런던 · 맨체스터 · 버밍엄에서) 일치 단결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은 분쇄되고 말 것이다.

결정

이런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혁명적 상황도 아니고 사악한 지도자들이 민주집중제를 너무 쉽게 조작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고 비판가들은 주장한다. 반민주적 조작이 당의 형식적 규약과 무관하게 항상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집중제는 그런 조작을 더 어렵게 만들지 더 쉽게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집중제는 당의 기층 당원들뿐 아니라 지도자들도 규율하기 때문이다.

민주적 토론과 논쟁의 수준은 높지만 중앙집중제는 거의 없는 당을 떠올려 보라. 토니 블레어가 장악하기 전의 영국 노동당이 그런 정당이었다. 당시 노동당의 연례 당대회에서는 열정적 논쟁,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민주적으로 제안되고 표결에 부쳐지는 결의안이 넘쳐났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중앙집중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당대회 결정 사항들을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특히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더 그랬다. 중앙집중제가 없었으므로 민주주의도 없었다. 왜냐하면 당의 노동계급 다수가 자신들의 견해를 행동 지침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민주집중제 문제는 계급 문제다. 노동계급은 민주주의와 중앙집중제가 모두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동계급 운동은 함께 행동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성형수술 권하는 사회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은 파리 코윈의 여성 투사 루이즈 마셀이 법정에서 자신과 파리 코윈의 대의를 방어하면서 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승주

얼마 전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다가 ‘퀵 성형’이라며 주사 바늘을 리포터 얼굴에 찔러 넣는 장면에 잠이 확 깨 버린 적이 있다. 즐거운 이벤트에 참가하는 듯 내내 생글거리는 리포터를 보고 매우 의아했지만 그것이 유난스러운 사례는 아니었다.

성형·피부 관리 등으로 여성을 “신데렐라”로 변신시켜 주는 국내 케이블 프로그램은 일곱 번째 시즌을 방영중이고, 공영방송 건강 프로그램도 한 시간 내내 가슴 성형과 지방흡입을 홍보하고 있었다. 이제 성형수술도 ‘자신감 있고 당당한 나’를 만드는 전략이 된 것이다.

서점 아동도서 코너에 가면 “도톰하고 사랑스러운 입술 만들기”나 “완벽 보디라인 만들기”를 가르치는 책들이 깔려 있고, 여자의 모든 인생이 20대에 결정된다고 선언하는 처세서도 “미모는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못박는다.

외모지상주의는 실질적인 차별로 나타난다. 2006년 대통령 자문 차별시정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의 용모를 중시하는 고용 관행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래서 취업을 앞둔 실업계 여고생들에게는 교사가 성형을 권하기도 한다. 최근 한 20대 여성잡지가 연 ‘직업별 맞춤 성형’ 이벤트는, 아나운서나 스텝어디스 같은 전문직 여성에게도 능력뿐 아니라 정형화된 미모를 요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최근 수십 년간 한국 여성들의 삶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자는 ‘일단 예뻐야’ 하는 것이다.

외모지상주의, 여성 차별, 자본주의

여성이 눈요깃거리로 여겨지는 것은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 있다. 인류 탄생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지만 계급이 분화하고 재산 세습을 위한 가족이 발전하면서 여성은 분만도구나 향락도구로 전락했다.(이에 관해선 본지 웹사이트에서 <맞불> 74호 ‘앵겔스와 여성 억압의 기원’과 95호 ‘여성 차별에 대한 가부장제 이론과 맑스주의 이론’을 보시오) ‘장식품’이 된 여성에게 외모를 가꾸는 일은 중요했다.

그러나 그 양상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상류층 여성들에게만 당대의 이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단과 여유가 있었다. 뼈 빠지게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고 기본적인 청결도 못 챙겼던 피지배계급 여성에게 몸단장은 사치였다. 발일을 하면서 화려한 치마를 끌거나 무거운 가발을 쓸 순 없는 노릇이었다.

정형화된 미를 추구하는 게 모든 여성의 지상 명제가 된 것은 자본주의 들어서 생산력이 발달하고 대중매체가 자리잡으

거식증 환자가 보는 거울 —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을 강요하는 사회가 낳은 비극을 보여 준다

면서부터다. 자본주의 들어서 여성의 지위는 변화를 겪었고, 예전에 없던 권리를 획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에게 외모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새롭게 강화됐다. 이 과정을 매개한 것이 ‘상품화’였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변화시킨 자본주의는 여성의 얼굴과 몸도 상품으로 변화시켰다. 여성의 이미지는 하나의 인격체와 분리돼 사고 팔리는 물건처럼 규격화됐고, 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됐다. 대중매체와 상품 판매망을 따라 외모지상주의가 보편화한 것이다.

대중문화가 공급하는 이미지를 동시에 접하고 스타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오늘날 패션의 기초는 ‘황금의 20년대’라고 일컬어진 1920년대 미국에서 살펴볼 수 있다. 라디오, 영화관 등이 널리 보급됐고, 소비재의 대량 생산으로 시작된 대규모 광고는 소비와 쾌락을 부추겼다.

당시 광고는 주로 여성을 겨냥했고(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의 8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구매했다) 남편을 잡아두기 위한 관능미를 가꾸라고 재촉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금욕적 도덕이 약화하고 성적 만족이 결혼생활에서 점점 중요해지면서, 가정의 유지를 위한 여성의 의무에는 성적 매혹 능력이 추가됐고 기업은 이것을 활용했다. 당시 잡지 광고를 보면 여성들이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청소기나 세탁기 광고도 주부의 젊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게 즐거웠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거의 모든 가정

에 보급된 TV는 정형화된 미녀 이미지를 일상 깊숙이 전파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피임약 보급으로 여성의 경제적·성적 통제권이 확대되고 사회 전반에 개방적 성 풍조가 확산됐지만, 기업과 언론은 이런 긍정적 변화를 왜곡했다. 그들은 색시한 외모로 남자를 유혹하는 게 여성 우위를 증명하는 것처럼 묘사했다. 외모가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전제는 변함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은 1960~70년대의 여성해방 염원과 성적 급진주의마저 상품화 해 여성들의 외모 강박을 부추겼고 이런 공세는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많은 대중매체가 솔직한 성 표현을 빙자해 ‘포르노화’했고, 여성의 나체를 상업적으로 전시한다. 패션 업계가 동원하는 모델들은, 갈수록 기아 상태에 가까운 몸 — 반면 가슴과 엉덩이는 풍만한 — 을 선보인다.

기업과 성형외과 병원들은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불안을 자극해 잇속을 차린다. 미모에 대한 정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수록 뻣뻣해지고, 이를 위한 ‘관리’에 드는 수고는 모두 소비해야 할 상품 목록이 된다. 성형, 화장품, 다이어트 등 국내 미용산업 규모는 적게 잡아도 연간 10조 원이다. 언론도 어마어마한 광고 수입을 올리며 이를 부추긴다.

이런 현실은 우리의 감정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여자는 예쁘고 잘 빠져야 한다’는 주문이 마치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요구인 듯 여겨졌다. 여성들은 외부의 비현실적인 틀에 맞추려고 자

신을 다그치는 데 익숙해졌다.

의연하게 ‘내면의 아름다움’만 쌓다간 도태될 것 같은 사회에서, 나름의 ‘대처’로 수술대에 오르고 비싼 화장품을 구입하는 여성들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다.

자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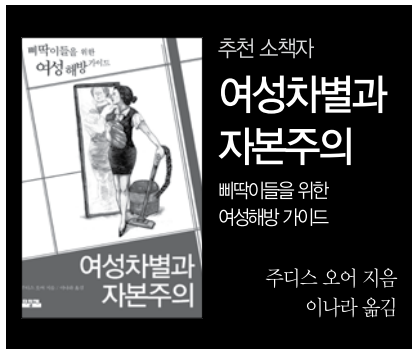
그러나 강박적인 외모 관리가 ‘자신감’을 드높이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바비인형 같은 완벽한 미모는 수백 광년쯤 떨어진 저 먼 곳에 있어서 애초에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얼굴과 몸매를 무시하고 화보 속 모델을 경쟁상대 삼다 보면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니 연예인들도 줄곧 수술칼에 얼굴을 맡기는 게 아닌가. 이것은 자신감의 표현과 거리가 멀다.

거식증의 90퍼센트가 12~25세 여성에게 발생하고, 2002년 미국에서만 거식증 환자가 1천5백만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외모에 대한 강박관념이 낳은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거식증을 동경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개설되고, 거식증 걸리는 법을 알려달라는 소름끼치는 질문들이 네이버에 올라온다.

‘착한’ 얼굴과 몸매가 우리 인격을 대신하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던 오랜 차별의 일부일 뿐이다. 여성을 대상화하는 편견에 몸을 맞춰야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다.

그래서 1960~70년대 서구에서 여성해방을 위해 싸웠던 활동가들은 미스아메리카 대회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외모지상주의에 저항하는 행동을 조직해 전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여성민우회 등이 여성에게 용모단정을 요구하는 기업 채용 관행에 항의해 남녀고용평등법에 용모제한 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미스코리아 대회 생중계는 오랜 항의 끝에 2002년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사라졌다.

나아가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악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체제에 맞선 거대한 도전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뭐든지 상품화하는 이윤 중심 사회와 여성차별을 없앨 때, 여성은 외모로 차등 대우받는 장식품이 아니라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황석영 소설 — 《바리데기》(창비), 《개밥바라기별》(문학동네)

전쟁과 억압 속에 고뇌하는 청년들의 성장기

예술에서 재미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환상에서 온다. 예술에서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진실에서 온다. 그렇다면, 예술에서 감동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환상과 진실의 만남에서 온다. 작품이 환상이라는 불꽃을 달고 우주공간처럼 광활하고 복잡한 진실의 심장부를 탐험할 때 우리는 감동을 느낀다.

그런 감동을 느끼고픈 당신이 이 세상의 부조리가 유지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황석영 소설 《바리데기》와 《개밥바라기별》을 읽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바리데기》는 북한에서 태어난 주인공 바리가 중국으로, 영국으로 옮겨 다니며 겪는 이야기다.

북한에서 태어난 바리의 가족은 1990년대 중엽 불어 닳친 식량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다. 바리는 아버지, 할머니, 바로 윗언니와 중국으로 탈북하지만, 굶주림과 추위로 나머지 가족을 모두 잃는다.

신비한 능력으로 살아남은 바리는 중국에서 고된 탈북자 생활을 하다 우여곡절 끝에 영국으로 밀항한다. 영국에서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힘든 생활을 근근이 이어 간다.

파키스탄 이민 2세인 알리와 결혼을 하지만, 아프카니스탄 전쟁이 일어나 남편은 이

슬람 동포들을 구하겠다고 참전한다.

소설은 바리가 세상을 돌면서 겪는 이야기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지옥에 생명을 구하러 떠나는 바리데기 전설을 엮으며 탈북자, 불평등, 전쟁과 같은 세상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꿰뚫고 있다. 작가는 환상을 통해서 진실을 펼쳐내는 마법을 이 소설에서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옥 같은 세계

맑스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의 현실을 단테의 지옥에 비유한 것처럼 황석영은 바리데기 전설을 통해 지금 이 세계를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다. 동시에 바리데기가 생명을 찾아 지옥의 갖가지 어려움을 헤쳐 나가듯 우리도 지옥 같은 세계를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현실에서 황석영이 생명을 찾아가는 방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황석영이 최근 ‘촛불을 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이 소설이 주는 감동과 영감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책 뒤에 실린 작가 인터뷰에서 이 세상의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을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면 된다.

《개밥바라기별》은 황석영이 《바리데기》 이후 젊고 어린 독자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쓴 소설이다.

“잘 나갈 때는 셋별, 저렇게 우리처럼 쏠리고 몰릴 때면 개밥바라기”라는 말처럼 이 소설은 세상에 쏠리고 몰린 주인공 준과 친구들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성장 이야기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준은 작가의 어린 시절이기도 하다.)

준이 친구들과 집회에 나갔다가 친구를 잃는 얘기, 권위적인 학교와 충돌을 벌이는 얘기, 이후 방랑의 길을 떠나는 얘기까지 등장 인물들의 개인적 성장 얘기는 세상의 아픔을 겪어 나가는 얘기도 하다.

이 소설은 한 예술가의 젊은 시절 자아와 세계의 충돌을 다룬 자전적 이야기라는 점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많이 닮았다. 그 젊은 시절 고민들은 이후 작가 인생 전체를 숙명처럼 따라다니게 된다. 조이스에게는 종교와 아일랜드의 현실이, 황석영에게는 시대의 아픔이 그랬다.

평범한 듯하지만 호흡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는 황석영의 유려한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뜨거운 인간애와 대면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승영

서평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권성현 외, 후마니타스)

삶을 변화시킨
따사로운
봄날들

지난해 여름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투쟁은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는 이 노동자들의 얘기를 다룬 책 이름이다. 그리고 이랜드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기도 할 것이다.

이 책은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잘 담아냈다. 주로 이랜드일 반노조 조합원들의 인터뷰로 구성된 이 책은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건 모멸감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로 따사로운 봄날 같아요”, “이기든 지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거 같아요.” 노동자들이 말하는 투쟁에 나서게 된 계기, 파업을 하며 느낀 해방감, 의식의 변화 등은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진 이 책에서 맛볼 수 있는 묘미다.

소박한 꿈

‘진상 고객’으로 가장한 관리자의 모니터링에서는 단지 웃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벌점이 매겨진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입술 칠하는 색



을 검사하고 양말 종류까지 통제한다는 끔찍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기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매장 점거 당시 지도부는 1박 2일 계획으로 점거를 들어갔으나 조합원들의 요구로 무기한 점거 파업에 돌입한다. 투쟁의 정점이었다. 경찰은 점거 노동자들의 몇 십 배가 넘는 병력을 동원해 이들의 ‘소박한 꿈’을 짓밟았다.

그러나 이랜드 투쟁은 정치적 승리를 거둔 투쟁이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77.6퍼센트의 응답자가 “정부와 회사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전국적 연대 파업이었다. 이 책에서 이런 평가를 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이랜드 투쟁의 시작과 뜨거웠던 여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

김무석

제5회 EB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

9월 22일부터 열리는 이 영화제는 작품들을 TV채널과 극장 양쪽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쟁부문 본선작들은 EBS Space에서 선착순 무료 상영한다.) 이 영화제의 더 좋은 점은 전쟁, 환경파괴, 차별, 가난 같은 체제의 오물들을 뒤집어쓰고 지구 곳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절한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세계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궁금대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함께 보기를 권한다.

《택시 투 더 다크 사이드》 점령군에 살해당한 이 아프가니스탄 택시 운전사의 죽음을 그저 감상만 할 수 있을까?

《포그 오브 워》 베트남전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의 인터뷰다. 지배계급의 심리와 사고를 예리하게 드러낸 작품.

《프리헬드》 여기 6개월 시한부 인생의 한 레즈비언이 있다. 그녀는 죽기 전까지 동성애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한다.

《벽안의 아이들》 러시아 소년원의 아이들. 타고난 문제 아들은 없다. 있는 것은 문제 있는 사회 뿐이다.

《가미카제 이야기》 그들이 정말 제국 일본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살아남은 가미카제 대원이 조작된 애국심에 대해 증언한다.

《라제테》 1962년 작. 가상의 핵 전쟁 이후 사회를 그린 작품. 당시 미·소 양대 제국주의 핵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재앙을 묘사했다.

《에덴의 악마들》 멕시코 칸쿤의 권력자들이 가난한 아동들에게 저지르는 강제 노동과 성적 학대를 고발한다.

《양쯔강을 따라서》 어떻게 댐 건설 한다고 2백만 명을 내쫓을 수 있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라고? 어디서 많이 들던 소리인데?

《붉은 경쟁》 금메달을 위해 중국의 ‘체조 공장’에서 혹사당하는 이 아이들을 보고도 올림픽을 마냥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온 소녀들》 이스라엘에 입양된 소녀들이 생모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한 풍경이 펼쳐진다.

《함디와 마리아》 (단편)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폭격. 그러나 통계 숫자와 딱딱한 문자로만 표현되는 기사보도들. 우리는 보아야 한다. 한 팔레스타인 가족이 겪는 비극을.

자세한 상영 안내는 www.eidf.org 참조.

한수영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가계 부채 등으로 날마다 대중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논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등 평범한 대중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과 대다수 정치인도 대중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의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로 대중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아래 집약한 요구들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의 논리에 도전한다. 그래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의 결집점 구실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투쟁은 위기 상황에서 우익이 득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막는 보루가 될 수 있고, 지배자들과 사용자들 공세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

물론 이 요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자본주의 체제에 명시적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개혁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요구들을 성취하기 위한 노동자 투쟁의 논리는 자본가 계급 재산권의 토대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과 우익의 반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 투쟁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훨씬 더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적 우선순위의 복원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 말이다.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더 강화될 전쟁 위협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다음의 요구들을 둘러싸고 공동의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 **물가 통제와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

고유가·고물가로 말미암은 노동자·서민의 고통 완화를 위해 물가를 통제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

●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직장폐쇄와 대량 해고를 단행하려는 기업은 공기업으로 전환시켜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적절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장이다. 왜 어떤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는 한편으로 다른 노동자는 산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으로 삶이 망가져야 하는가? 임금 등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개선해야 한다.

●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무려 55퍼센트 정도가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

현행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적어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필수유지업무제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 **FTA 반대**

FTA는 단지 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와 시장화를 경제 전체에 강요하려는 것이다.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대, 식품안전 위협, 환경파괴, 공공서비스 후퇴 등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투기자본 규제**

투기자본의 활동은 노동자의 화생을 강요하고 금융위기를 부채질한다. 투기적 수익에 종국세하고 그 세수입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투기를 규제하고, 투기자본을 양성하는 관련법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된다. 교육·의료·물·전기·가스·철도·금융·지하철·정유·통신·언론·우편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한 부분은 재국유화해야 한다.

●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보장을 위한 충분한 소득원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거의 절반이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급여가 지급돼야 하고, 그 부담은 국민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노동으로 혜택을 받은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한다.

●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과 주택이 생활에 필요한 거주지가 아니라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하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 **무상 의료**

의료는 상품이 돼선 안 되고 예방, 치료, 재활 등 의료의 모든 분야가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

● **입시 폐지와 무상 교육**

초·중고 학생들은 입시 경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입시 경쟁은 사고육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자사고·특목고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대폭 증액해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등록금 인상은 중단돼야 한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의 대학 지배도 없어져야 한다.

●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정부는 대중의 요구에 대해 재원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부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그 누진율도 올려야 한다.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유사 등에도 초과세해야 한다.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대한 점령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파병 부대를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선 안 되지만, 이를 빌미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데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협력하려는 전략한미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과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파트너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영구 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도 중단해야 한다. 군비증강 예산을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 **남북한 민중의 연대를 위해**

남북한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남북 적대를 이용해 민중을 억압해 왔고, 화해를 시도할 때조차 민중의 삶은 안중에 없었다. 남한 민중은 외교 논리보다 북한 민중과의 연대를 우선해야 한다. 식량 지원이 대북 안락 수단이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 민중을 위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남한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를 환영해야 한다. 또,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제국주의적 압박에 반대하면서도 북한 민중 스스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도 지지해야 한다.

●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력 강화, 인터넷·언론 통제 등 민주적 기본권을 가로막는 온갖 법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각종 보안 수사기관을 해체해야 하고, 수감 시설과 경찰·검찰·군대 등에 대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배심원제의 도입 등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패 공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부패 기업은 공기업화해야 한다.

● **여성과 소수자 차별 반대**

여성·이주자·장애인·동성애자 차별 등 부당하며 운동을 분열시키는 온갖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여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무상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 낙태 금지법, 간통죄 등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모두 폐지돼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출입국과 취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지구 온난화 중단**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더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핵 에너지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포럼에 초대합니다

대학 맑스주의 포럼

맑스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사회
연사_ 정병호
9/23(화) 오후 6시 30분
부산대 사회대 202호
문의 010-8367-0610

위기의 신자유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연사_ 정종남
9/24(수) 오후 6시 30분
서울시립대 종합강의동 112호
문의 011-9347-1075
참가비 1천 원

러시아—그루지야 전쟁, 신냉전이 도래하는가
연사_ 정진희
9/25(목) 오후 7시
이화여대 포스코관 461호
문의 010-2263-1106
참가비 2천 원

오바마가 부시와 다른 미국을 만들 수 있을까?
연사_ 서범진
9/25(목) 오후 6시 30분
중앙대 문과대 2855호
문의 010-3163-1673
참가비 1천 원

버락 오바마 — 제국을 변화시킬 희망인가?
연사_ 조명훈
9/25(목) 오후 6시 30분
고려대 문과대(서관) 316B호
문의 016-546-5560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이 도래할 것인가
연사_ 이수현
9/30(화) 오후 6시
충남대 인문대 104호
문의 010-5712-1300

지역사회포럼

성동광진 사회포럼
핵 에너지가 지구온난화의 대안이 될까
연사_ 장호종
9/25(목) 오후 7시 30분
여성능력개발원 3층 3강의실
(건대역 6번 출구)
문의 011-9038-0657
참가비 2천 원

중부 사회포럼
경제위기와 저항 그리고 행동강령
연사_ 김태현
9/24(수) 오후 8시 / 임호빌딩 702호(종로5가역 2번 출구 이화예식장 옆)
문의 010-7326-3286
참가비 2천 원

교사 포럼
영화 <교실에서 거리로> 상영 (멕시코 교원민주노조 제작)
영화 상영 후 1시간 자유토론
9/20(목) 오후 4시 / 전교조 서울지부 9층 강당(이수역 7호선 7번 출구 승지빌딩)
주최_ 다함께 교사모임 / 문의 02-2271-2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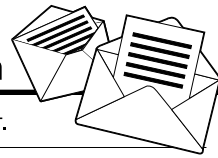
북부 사회포럼
이명박,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연사_ 정종남
9/23(화) 오후 7시 30분
인권실천시민연대 5층(한성대역 7번 출구)
문의 010-5544-4285
참가비 2천 원

서부 사회포럼
반이명박 국민전선의 정치학 — 진보진영이 민주당과도 연합해야 할까
연사_ 김인식
9/26(금) 오후 8시 / 신촌 아트레온 14층 토즈(신촌역 4번 출구 200미터)
문의 016-785-4957
참가비 3천 원

경기남부 사회포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이 도래하는가
연사_ 김인식
9/23(화) 오후 7시 30분
수원 경희대 국제캠퍼스 외국어대 405호
문의 010-6663-0032

강원 사회포럼
맑스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사회
연사_ 최영준
9/25(목) 오후 7시 30분
팔도광장 광장서적 2층 북카페
문의 010-9805-1050

인천 사회포럼
맑스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사회
9/25(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추후 공지
문의 010-5571-1917



9월 22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지면 관계상 실리지 않는 독자편지는 온라인에 실립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 · 재건축인가

지금 송파 잠실단지 8년 동안의 재건축을 마무리하면서 30층 아파트들이 입주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8년 전 11평형에 살던 주민이 새로 지은 33평형에 입주하려면 해당하는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11평형에서 33평형에 입주한다면 3억 9천6백만 원가량을, 18평형에서 52평형에 입주한다면 6억 1천2백만 원을 분담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등록세 · 취득세 등과 옵션 추가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세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 서민들이 8년 동안 4억~7억 원을 모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입주자들은 새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을 찾아 주택담보 대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 빚을 안고서라도 집을 지키는 이유는 시세 차이 때문이다.

33평형의 경우 분담금 4억 원가량을 대출받아도 현 시세(2008년)는 9억 7천

만 원 선이니 5억 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은행담보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은 높은 대출금리에 결국 아파트를 포기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집들은 부동산세법을 완화하는 틈을 타 투기꾼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재개발을 위해 철거중인 아파트 —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명박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 감세를 떠벌렸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민영 주택건설사의 분양가 전면 공개, 부동산세 강화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

홍기현

자이툰의 비극과 모순

나는 군생활 중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에 지원했다 탈락한 경험이 있다. 아직까지 자이툰에 전사자는 없다. 그러나 지원할 때 장교로부터 전해들은 바로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병사와 장교는 2~3명 정도 있다. 또한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 경비를 맡고 있는 해병대원 중에는 대사관 앞에서 일어난 참혹한 차량폭탄테러로 정신병을 얻어 귀국한 경우도 있다.

비록 전투병 파병은 아니지만, 제국의 뒤를 봐준다는 핑계 하에 진행되는 점령

은 우리 새파란 젊은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뿐이다.

비군사적 지원(non-military help)이나, 비전투적 지원(non-combat help)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있던 특전사사령부 안에는 707대 테러특임부대를 제외하고 전문적으로 전투만을 훈련하는 부대는 없다. 사령부 옆에 있는 제3공수여단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자주 왕래할 기회가 있었는데, 3여단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대들은 교대로 이

라크로 출국을 해서 대대 건물이 비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즉, 전문 전투병력(병사로 이뤄진 병력이 아닌 부사관으로 이뤄진)을 파병한다는 얘기가. 이는 애초의 비전투적 지원(non-combat help)과는 모순이다.

많은 언론과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이 말을 하긴 조심스럽다. 어쨌든 이 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미국 달러와 바꾸는 미친 짓을 그만 두었으면 한다.

조진

이명박의 ‘폴리페서’들은 강단에 설 자격 없다

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이다. 얼마 전 수강신청을 하던 중 보고 싶지 않은 이름을 보게 됐다.

지난 학기에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내던 김병국 교수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것이다. 김병국 교수는 지난 학기에 ‘비교정치’ 수업을 하다가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에 참가했고 결국 하던 수업조차 중도에 그만뒀다. 위장전입과 탈세,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학과로 돌아온 광승준 교수는 더 이상가관이다. 그는 지난 학기에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미래전략위원회에서도 일한 그는 광우병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명박의 우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도 1백10억 원의 재산을 갖고도 작년에 증여받은 땅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는 두 교수의 복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경대 학생의 63.6퍼

센트도 이들의 교수 복직에 반대한다. 찬성하는 학생은 5.6퍼센트에 불과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장을 지내던 류우익도 최근 서울대 지리학과로 돌아왔다. 민주주의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에 적극 동참한 이런 교수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자들이 대학에 돌아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김재린

“질긴 쪽이 승리한다”

이어서 질문이 이어졌다.

“오랫동안 촛불을 들었지만,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데 촛불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여간첩 사건과 촛불 운동을 엮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한홍구 교수는 ‘촛불 운동의 성과’에 대해서 “4·9 총선으로 인해 생겼던 ‘대중의 보수화’론이 틀렸고,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며 “질긴 쪽이 승리한다”, “될 때까지 모입시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정치를 꼭 여의도(국회)에 한정하지는 필요가 없다.”면서 ‘거리의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강연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촛불집회 장소로 이동했다.

김재원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광고주인 주류 언론은 진실을 은폐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개인이라면 강력히 저항할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저항의 촛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홍보전을 벌이고 대중 행동에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해서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www.alltogether.or.kr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투쟁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간
<저항의 촛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2만 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1년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resistcandle.com reader@resistcandle.com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백은진)



‘계속 파업’을 택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에서도 현장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와 사측의 잠정합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를 분열시키려 했던 현대 재벌에게 현장 노동자들이 통쾌한 편지를 날린 것이다. 이를 보고 주류 언론들은 ‘도대체 얼마를 더 달라는 거냐’, ‘귀족노조의 오만과 이기주의’ 등 온갖 비난과 마녀사냥을 했다. 그러나 과연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배부른 귀족’이라서 20년 동안 매년 파업을 하는 걸까? 왜 파업을 하는지 지배자들과 주류 언론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동차 노동자들은 주야 맞교대로 일한다. 점심시간과 교대시간을 빼고는 컨베이어벨트에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 특히 심야노동의 고통은 끔찍하다.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인지 컨베이어벨트의 부속품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야간노동을 30년씩 하게 되면 수명이 10~15년씩 단축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지 오래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가족관계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주중에 아이들 얼굴 한 번 보며 대화할 시간조차 없다. 그래서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야간노동 철폐는 정말이지 꿈과 희망이다. 따라서 금속노조 차원의 강력한 공동파업이 필요했다.

야간노동 철폐

그런데 아쉽게도 금속노조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고 현대·기아차조차 공동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협

상으로 사측의 양보를 얻으려 했다. 유감스럽게도 현대·기아차 노조 지도부는 노동조건이 후퇴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주간연속2교대 안을 합의해 투표에 부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지도부의 파업 회피와 잘못된 합의에 현장 조합원들은 역대 최대의 부결로 답했다. 추석을 코앞에 둔 시점에 수백만 원의 일일급 지급이라는 유혹도 뿌리치고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당당하게 투쟁을 선택했다.

야간노동 철폐와 물가인상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9월 10일 열린 현대차노조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라도 현대·기아차 지부의 강력한 공동파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금속산업의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함께 걸고 공동파업에 나서야 한다.

〈한국일보〉는 이번에 열을 올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을 비난하더니 “더 큰 해악은 ... 다른 업종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고 썼다.

그렇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많은 산업과 업종에서 야간노동 철폐와 실질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우용(기아차지부 소속 금속노조 중앙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해고 조합원 6명이 해고 2백50일 만에 전원 원직 복직됐다.

9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고 해고 조합원들은 9월 19일부터 출근하게 됐다.

1인 시위, 항의 집회 등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얻어 낸 값진 승리다.

공단의 대표소 외주화 위협과 비인격적 처우, 한국노총 지도부의 외면 등에 시

달린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임시 총회를 개최해 민주노총 공공노조로 상급단체를 변경했다.

단결

민주노조를 만든 ‘땃가’로 총회 4일 만에 조합원 6명은 해고됐고, 2백40여 명은 출퇴근 4~5시간 걸리는 원거리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굴복하지 않고 민주노총 공공노조의 지원을 받으며 단호

한 투쟁을 계속했다.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은 “마음만 먹고 단결한다면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취임한 신임 이사장 김주훈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의 체육·청소년 분야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MB맨이다. 취임식장에서 “방만한 경영을 손보겠다”며 구조조정을 엄포한 MB맨에게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통쾌한 한 방을 날린 것이다.

강철구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 공동 투쟁의 승리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올해 임단협을 승리로 끝냈다.

노동조합은 ‘공공의료 강화, 다인용 병실 확대와 CCTV 철거, 1년 이상 단시간 근무자 정규직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줄이기’ 등을 요구해 대부분 성취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2백85명의 온전한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을 만들어냈던 것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1백20여 명을 정규직화하

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타결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의 단호한 입장과 투쟁에 사측은 물러섰다.

또한 ‘40세 이상 간호사는 야간근무에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밤근무 후 휴일을 인정하는 ‘재충전의 날(Recovery day)’ 조항도 부분적으로 쟁취했다.

의료연대노조 성원개발분회도 올해 임단협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성원개발분회는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를 하

는 용역업체인 성원개발(주)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필수유지업무제

성원개발 노동자들은 83퍼센트의 높은 파업 찬성율과 함께 필수유지업무제를 거부하고 전원 파업에 참가한다는 높은 투지로 사측의 양보를 받아 냈다. 조합원들은 9월 9일 파업을 결의했고,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투쟁열기를

알리안츠생명노조 파업의 성과와 아쉬움

사측의 일방적 성과급제 도입과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8개월여 동안 파업 투쟁을 펼쳐 온 알리안츠생명노조가 9월 12일 성과급제 지급 격차 완화, 해고 지점장 91명 전원 복직, 임금 5퍼센트 인상,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취하, 파업참가자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을 사측과 합의하고 파업을 마무리했다.

알리안츠생명노조 투쟁에 대한 정부와 사측 공격은 거셌다. 노동부 장관 이영희는 국무회의에서 이명박에게 알리안츠생명노조 파업을 직접 보고하면서 “지점장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고무된 사측은 곧바로 지점장 조합원 91명을 해고했으며, 경찰의 비호 아래 용역 깡패를 동원해 노조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게다가 법원과 검찰은 제종규 노조위원장을 구속 수사하기까지 했다.

자신감

조합원들은 이런 탄압과 8개월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끈질긴 투쟁으로 사측이 의도한 성과급제보다 지급 격차를 줄였다.

무노동 무임금을 무력화시키며 파업 기간 임금도 상당 부분 받게 됐다. 사측의 선제공격과 정부의 지원 공격에 맞서 선방한 셈이다. 따라서 알리안츠 노조가 패배했다는 주류 언론들의 보도는 왜곡이다.

물론 성과급제 도입 자체를 막지 못한 점과 ‘앞으로 2년 동안 무쟁의’를 합의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47년 만에 첫 파업에 들어간 조합원들이 230일이 넘는 파업으로 경찰과 용역 깡패에 단호히 맞선 것은 값진 경험이다.

조합원들은 파업 기간에 촛불시위에 참가해 자신감을 얻었고 코스콤비정규지부 투쟁에 함께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 주기도 했다.

알리안츠생명노조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맞서 노동자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

김영재

감당하기 어려워진 성원개발이 임금 총액 13만 원 인상, 노조전임 2명 인정, 조합원 가입 범위 확대를 수용해 승리를 쟁취하게 됐다.

이것은 원·하청 공동 투쟁을 한 결과이기에 더욱 소중하다. 원청 노조인 서울대병원분회는 “성원개발이 끝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도 마무리하지 않겠다”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투쟁지원금 모금과 투쟁물품 전달, 투쟁 지지글 보내기 등 공동 투쟁을 아래로부터 확산해 나갔다.

성원개발분회의 승리는 원·하청 공동 투쟁의 힘을 보여 준 소중한 사례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감동적인 승리

“뭉치면 산다는 말이 딱 맞아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를 당한 후, 대학 행정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단 2주 만에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성신여대 총장 심화진은 지난해 성신여고에서 학교 비정규직 정수운 씨를 해고하는 데도 관여했다. 당시 정수운 씨는 끈질기게 투쟁해 복직했다. 이런 투쟁이 이번에도 밑거름이 됐다.

강력한 노학연대 덕분에 성신여대 당국과 용역 업체는 조합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노조 활동 보장, 농성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성신여대 노동자들의 승리는 이명박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소중한 경험이다.

공공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성신여대분회 **나중례 분회장**과 **정미순 조합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Q. 노조를 만들기 전에는 어땠나요?

정미순(이하 정) 땀벌에 잔디밭 풀 뽑으라고 시키는데 아줌마들이 진짜 일사병 걸리고 그래요. 설 데도 없고, 밥 먹을 마땅한 데도 없는데 한겨울에는 도시락 싸와서 찬밥을 먹어야 했어요.

나중례(이하 나) 총무처장은 흰 장갑을 끼고 창틀 먼지, 번기에 묻은 때 같은 걸 묻혀 가며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하고 다녔어요. 우리들을 너무 복아냈어요. 자기들은 심지어 화장실도 냉방을 하면서, 우리는 더워서 얼굴 시뻘겋게 돼 일하고 있으면 땀을 먹었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Q. 노조를 만들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나 그 전에는 63만 원밖에 못 받다가 노조 만들고 72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 전

에는 1년에 겨우 5일 놀았는데, 노조 만들고 월차도 생겼어요.

노조하기 전에는 파업하는 사람들 소식을 뉴스에서 보면, 왜 파업하고 노조를 만드냐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노조가 있어야 할 말을 할 수 있단 생각이 들어요. 소장 같은 작자들이 우리들더러 특하면 제대로 된 노가다맛을 보여 주겠다는 등, 삼청교육대 같은 데를 보내 주겠다는 등 협박해왔지만, 노조를 만들고 나서는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Q. 이번 투쟁 때 전교생이 9천 명인 성신여대에서, 3일만에 6천5백 명이나 지지서명을 했다면서요?

정 우리가 농성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이 제일 먼저 와 줬어요. 개강하던 날에는 “총장님은 거짓말쟁이”라고 크게 써서 학교 안을 도배했어요. 우리 월급을 1백



승리를 서로 축하하며 기뻐하는 나중례 분회장(가운데)과 성신여대 학생(왼쪽)

20만 원씩 준다고 했던 거짓말을 알린 거예요. 그 대자보를 보고 학생들은 기가 막혀 했어요.

강의실 선전전도 같이 들어갔어요. 교수님들도 대부분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사회대 학생회장이랑 선전전을 들어갔을 때, 학교 직원이 와서 “니들 나와!”하고 소리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회대 학생회장이 곳곳이 연설을 했어요. 직원이 소리소리 지르는데 얘기하는 학생회장도 울고, 얘기를 듣는 학생들도, 저도 울었어요.

총학생회 학생들은 우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이불 덮고 누우려는 새벽 2~3시에도 농성장에서 다음 날 불이라고 벽보를 쓰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이런



성신여대 학생들이 붙인 투쟁 지지 펼침막

일 하셨다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정말 학생들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나 졸업생들도 1백 명 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경향신문>[9월 9일자]에 하단통 광고를 실었어요. 학생들만이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만나면 힘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운수노조는 우리 농성한다고 쌀도 몇 포대씩 보내 주시고, 다른 노조에서도 지금을 많이 보내 주셨어요. 연대 집회 때 4백 명씩 와 주시고 그랬죠. [9월] 9일 연대집회는 총장이 직접 계속 내려다봤다고 그러더군요. 이를 뒤에 학교 쪽에서 먼저 보자고 연락을 해 왔어요.

연세대당 고려대 조합원들이 연대 집회 때 정말 많이 와 줬어요. 연세대 조합원들은 1백 명 넘게 오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노조는 먼저 만들었는데, 학교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대가 더 크다고도 했어요.

우리가 그 분들한테 다 빚진 거라고 생각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딱 맞아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2주일 동안 잠을 자서 몸이 성한 데는 없지만, 동료들을 서로 믿고 끝까지 함께 한 게 정말 중요했어요.

인터뷰 · 정리 백은진

국가보안법에 맞선 반격을 건설하자

사노련 사건의 구속영장이 일단 기각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곧 사노련 사건의 영장을 재청구하려 한다.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사노련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친북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공개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선동한 극렬 사회주의 계열 운동단체에 국가보안법 적용은 당연하다”, “반국가단체 수사는 사노련으로 끝이 아니다”며 ‘다함께’ 등 촛불시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던 단체들에 대한 공격 의도를 드러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진보연대의 이적행위 정황이 파악됐다”고도 했다.

영장 정보를 열람한 법원공무원노조 상근자에게는 영장 정보를 사노련 측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덮어씌워 구속하기까지 했다. 얼마 전에는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관련 문건을 올린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검거하기도 했다.

게다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 때문에 이명박이 좌파들을 속죄양 삼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에 매달리는 것은 반정부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공기업 민영화, 부유층

감세 정책, 재벌규제 완화 등을 밀어붙이기 위함이다. 나아가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시법·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대테러방지법·사이버모욕죄 신설 등도 추진하고 한다.

진보진영이 제대로 탄압에 대응할 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언제든 탄압이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은 진보진영을 계속 위축시키고 수세에 몰리게 할 것이다.

우선, 사노련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수 있도록 방어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설사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면 수사기록과 판례 등이 남아

향후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아예 공소 자체를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함께, 진보연대 등 촛불 운동에 참가한 주요 단체들로 탄압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

이미 이런 필요성에 공감해 사노련 탄압에 반대하는 공동 대책위(사노련 대책위)가 결성됐고, 9월 27일에는 사노련 대책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가보안법 탄압 반대 집회도 예정돼 있다. 이 집회는 대규모로 건설돼야 한다.

공안탄압에 반대하는 울산대책위가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 현장으로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같은 대중조직들은 이 집회에 실질적인 참가를 조직해 전체 운동에 대한 탄압에 맞서야 한다.

정종남